

2023.11.30.(목)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Tel 02-6788-3201·3631 / Fax 02-6788-3635 01원정 총괄팀장 010-5387-9680 / 장정욱 선임비서관(박주민 의원실) 010-6788-5732

<을지로위원회, 을(乙)을 위한 민생예산 통과촉구 긴급기자회견>

- 올(∠)을 위한 5대 민생예산 10조 3,347억 원 중액 촉구
- 말뿐인 민생이 아니라, 청년미래세대·소상공인 자영업자·비정규직·주거약자·사회취 약계층을 위해 정부·여당이 행동으로 동참하라!

2023년 11월 30일 (목) 10: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기국회에서 乙을 위한 민생예산 통과를 위해 정부여당의 동참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예산은 숫자로 쓰고 정책이라고 읽는 나라살림의 중요방향성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정부예산안을 수립하면서 물가 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2.8%만 증액하였습니다. 정부는 23조원을 '지출구조조정'해서 건전재정을 달성했다고 선전했지만, 이는 곳간지기 기재부의 이기주의만 반영된 감축을 위한 감축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이번 정부예산안은 정부의 노력으로 구조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감세와 경기하락에 따른 세수악화로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국민과 지방정부를 희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재정활동은 가정경제의 운영과는 다릅니다. 수입이 줄면 지출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가정경제의 원리이겠지만, 정부는 함부로 허리띠를 졸라매서는 안 됩니다. 호황국면에서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하지만 불황국면에는 적극적 재정으로 민생을 수호할 의무가 있기때문입니다. 이에 나라곳간을 지키기위해 민생을 희생시키는 것은 정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궤변입니다.

2024년 예산은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乙을 위한 예산이어야 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맞는 재정계획이 필요합니다. 세수감소에 따라 재정을 축소하는 것이 윤 석열 정부의 기조라하더라도 필요한 곳에는 재정을 늘려야 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을'의 고통을 줄 이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합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미래세대, 사회취약계 층, 코로나19 팬데믹을 어렵게 버텨온 소상공인, 비정규직, 전세사기피해자·주거지원이 필요

한 주거약자 등 국가가 재정을 통해 힘을 보태서 민생을 살려야합니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그동안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한 을을 위한 5대 민생예산 10조 3,347억 원 증액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첫째, 청년 앞길을 막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예산 감액은 원상 회복하고,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은 추가로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청년 년내일채움공제 ▲천원의 아침 ▲이공학학술기반연구 등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 증액을 통해 청년을 위한 미래 사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둘째,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증액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 위기 북한이탈주민의 발굴 및 법률지원 ▲장애인 창업혁신 지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등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을 지키고,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예산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야박한 예산을 반대합니다.

셋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예산을 통해 공정한 경제를 위한 생태계 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구축 ▲상권활성화 사업 ▲동반성장 상생판로 지원과 같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와 부활을 위한 예산이 절실합니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것이 아닌 재정 투입을 통한 적극적 정책시행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일하는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를 위한 마중물 예산으로써, ▲공공기관과 공단의 공무직 인건비 처우 개선 ▲고용안정 장려금-정규직 전환지원 등의 정책사업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해결을 주장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불평등한 처우개선 예산을 삭감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민 기만입니다.

다섯째,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 주거약자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 해야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방지지원사업 ▲공공임대 사업과 노후 공공임대 개선 사업 등 주거약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을 개선할 예산의 증액이 있어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했으니 이제는 언행일치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을을 위한 민생예산 증액과 동시에 예산의 '적재·적소·적기' 사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교육부의 학교교육환경개선비 증액과 동시에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목표를 조기 완수하여 학교급식노동자를 위한 신속한 폐질환 예방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많은 금융기관이 특례상품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금융취약계층이 빠르고 폭넓은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2024년 예산이, 적극적 재정을 통해 보다 어려운 삶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챙길 수 있는 민생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을 위한 여당과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3. 11. 30.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참고자료] 2024년 민생예산 중액요청 세부내용

1. 미래세대 지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년 동일 수준, 정부예산안 대비 338.49억 증액)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전년 동일 수준, 정부예산안 대비 2,960.44억 증액)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반) (전년 동일 수준, 정부예산안 대비 2805.95억 증액)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보) (전년 동일수준, 1,399.78억 증액)

[농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정부예산안 대비 25.71억 증액)

[교육부] 인문사회기초연구 - 학문후속세대지원 등(정부예산안 대비 317.2억 증액)

[교육부] 기초학문확산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10.99억 증액)

[교육부] 이공학학술연구기반 구축 - 청년미래인재 연구활동 지원 R&D (정부예산안 대비 1300억 증액)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체계 구축 (정부예산안 대비 10.7억 증액)

[농식품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72억 신규 증액)

2. 사회취약계층지원

[국토교통부]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한 저상 좌석버스 표준모델 개발(R&D) (정부예산안 대비 52.65억 증액)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부예산안 대비 2,880.22억 증액)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전년 동일 수준, 26.55억 신규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에너지바우처 (정부예산안 대비 1,338.09억 증액)

[법무부] 위기 북한이탈주민 발굴 및 법률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0.81억 증액)

[기획재정부] 장애인 창업혁신허브 구축 (신규) (중소벤처기업부 복권기금 사용신청, 8.44억 신규 증액)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 0세·장애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미만(1명)인 경우에도 인건비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268.86억 증액)

[보건복지부] 장애아동가족지원 -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단가 인상 및 지원확대(정부예산안 대비 315.17억 증액)

[보건복지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450억 증액)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신규) (61.01억 신규 증액)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 운영 조건 개선 (정부예산안 대비 40.72억 증액)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89.2억 증액)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9,226.97억 증액)

[보건복지부]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정부예산안 대비 74.28억 증액)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335.05억 증액)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정부예산안 대비 133.43억 증액)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정부예산안 대비 300억 증액)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정부예산안 대비 300억 증액)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 햇살론15 (정부예산안 대비 900억 증액)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 소액생계비대출 신규 (전년 동일 수준 500억 신규 증액)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전년 동일 수준, 105억 신규 증액)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지원 (전년 동일 수준, 75억 신규 증액)

[국회사무처] 구내식당 운영 - 인덕션 일괄교체 (정부예산안 대비 4.57억 증액)

[기획재정부] 근로 · 자녀장려세제 운영 (정부예산안 대비 7.23억 증액)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심리치료 및 회복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2.25억 증액)

3. 소상공인 지원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10,000억 신규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정부예산안 대비 17.36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사업 - 신규 지역상권 지원 (100억 신규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정부예산안 대비 141.2억 신규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지원 - 전기・가스 요금 경감 (정부예산안 대비 18,650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지원 - 역량강화 (정부예산안 대비 106.5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지원 - 빈 점포 활용지원 상권공동체 자산화 (정부예산안 대비 100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지원 -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정부예산안 대비 18.67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융자) - 일반경영자금 (정부예산안 대비 4,000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융자) - 소상공인 이차보전 (정부예산안 대비 15,000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융자) - 경영안정자금 및 정책자금 확대 (정부예산안 대비 8,000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융자)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복원 (정부예산안 대비 4,000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정부예산안 대비 1923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시장경영혁신지원 - 온누리상품권 등 (정부예산안 대비 600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지원 강화 (정부예산안 대비 307.45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 (정부예산안 대비 135.7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기반조성 (정부예산안 대비 39.48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정부예산안 대비 22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25.68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정부예산안 대비 1,600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제도 운영 - 동반성장 상생판로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20.06억 증액)

4.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지원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공무직 인건비 처우 개선 (정부예산안 대비 1.15억 증액)

[고용노동부] 고용안정 장려금-정규직 전환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123.07억 증액)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정부예산안 대비 12.15억 증액)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공무직 처우개선비 (정부예산안 대비 3.96억 증액)

[문화체육부] 학교예술강사 지원 (전년 동일 수준, 정부예산안 대비 287.36억 증액)

[문화체육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전년 동일 수준, 정부예산안 대비 51억 증액)

[국회사무처] 국회어린이집 위탁운영 보육교사 기본급 인상 (정부예산안 대비 7.29억 증액)

[국회사무처] 국회방송 민간근로비 인건비 - 공무직 전환 (정부예산안 대비 10.59억 증액)

[국회사무처] 국회 공무직 상여금 인상 및 가족수당 도입 (정부예산안 대비 18.93억 증액)

[통계청] 통계행정지원 인력운영 -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 (정부예산안 대비 76.39억 증액)

[대법원]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건 (정부예산안 대비 22.08억 증액)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단가인상 (정부예산안 대비 178억 증액)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단가인상 (정부예산안 대비 50억 증액)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최중증 주간 그룹 1:1 지원 단가인상 (정부예산안 대비 36억 증액)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등 (정부예산안 31.21억 증액)

5.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 주거약자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방지지원사업 (1,737억 신규 증액)

[국토교통부] 통합공공임대 융자 (정부예산안 대비 4,508.45억 증액)

[국토교통부] 통합공공임대 출자 (정부예산안 대비 4,508.45억 증액)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 (정부예산안 대비 100억 증액)

[국토교통부] 공공임대단지 사회복지관 시설개선 시범사업 (40억 신규 증액)